

변양군-신정아 수사 어떻게 돼가나

'입 맞춘' 변-신 신뢰 흔들어라

진술 조율한 듯...격리 조사로 실체 찾기 신씨 설령탕 잘 먹고 변씨 안부도 물어

신정아와 변양군이라는 직접 당사자들의 신빙을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탄 검찰 수사가 관계자들의 말 맞추기라는 마지막 장애물에 부딪혀 있다.

이에 따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변양군 전 청와대 실장의 '미리 짜맞춘' 진술 뒤에 숨겨진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검찰 수사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변 전 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신씨와 변 전 실장 측이 그 동안 상당히 조율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말하면 앞으로의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두 달 동안 미국 뉴욕에서 잠적했던 신씨는 변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16일 오후 전격 귀국, 두 사람이 사전 협의를 통해 진술 내용을 미리 짜맞춘 다음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이 같은 건물에서 나란히 사무실을 내고 있다는 점과 신씨의 변호인 박종복 변호사가 신씨 귀국에 앞서 일본 도쿄에서 2박3일간 미리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는 점 등도 이와 같은 추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씨와 변 전 실장, 두 사람 사이를 격리한 채 철저한 수사 보안 유지로 양측의 신뢰를 흔들며 미리 가공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의 진술을 유도해낸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검찰은 입국 직후 신씨를 체포해 모든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반면,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변 전 실장은 일단 귀가시킨 뒤 신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부르기로 했다.

그 사이 두 사람 사이의 대질신문을 가급적 피하고 이들의 진술 내용이나 수사 상황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지켜 양 측의 정보 교환 기회를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은 취재진으로부터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의 진술을 했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확인해줄 수 없다. 확인을 해주면 또 입을 맞출 것이다"라며 입을 닫았다.

신씨가 검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실을 털어놓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변 전 실장을 재차 소환해 의혹을 추궁하면 동국대 교수 및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기업체 후원 등에 관한 비호 혐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같은 건물에서 조사를 받은 변 전 실장과 신씨는 모두 지친 모습이 역력했으나 검찰 조사에는 순순히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될 때 긴장되고 지쳐보였으나 이날 저녁 식사 후 마음이 진정됐는지 검찰의 심문에 조곤조곤 자신의 혐의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처음에 (검찰청사에) 도착했을 때 긴장된 모습이었고 (심지어) 오는 도중에 토하기도 했다고 한다. 상당히 초조해 있었는데 저녁식사를 설렁탕으로 잘 먹었고 이후 조사에도 잘 응했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며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변 전 실장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 전 실장은 자진출석인 만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는지 검찰에서 자신을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찰 조사를 마친 변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새벽 서울서부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돈잔치' 왜 끊이지 않나

수백억 주무르는 '실속 감투' 당선만 되면 곳곳 영향력

광주·전남 올들어 9건 적발

광주·전남지역 단위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돈으로 얼룩진 불법·혼탁선거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단위조합장이 '실속있는 감투'로 부상한 데다, 지방자치제 구도 아래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위조합 운영과 관련,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돈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위반사례 속출=17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위반사례는 6개 농·수협에 걸쳐 모두 9건에 달했다. 이중 2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 4건은 경고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4건 ▲전화 이용 2건 ▲인쇄물 배부 1건 ▲호별 방문 1건, 기타 1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12일 치러진 곡성 석곡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한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3명에게 식사와 노래방 향응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서광주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후보가 추석선물 택배배달로 위장된 돈봉투 등을 돌렸다 가 역시 선관위에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수습위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선관위에 적발된 54건의 위반사례의 경우 고발 10건, 수사의뢰 8건, 경고 19건, 주의촉구 15건 등이었다. 이중 거의 절반이 금품·향응 제공이었다.

◇왜 불법선거 끊이지 않나=조합장 선거가 불법선거의 오명을 씻지 못하는 이유로는 단위조합의 불합리한 구조가 첫번째로 거론된다. 4년 임기의 단위조합장은 30여명 안팎의 직원

을 거느리고 연간 수백억원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의원과 함께 '실속있는 감투'로 불린다. 조합마다 다르지만, 재임기간 동안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봉과 관공비 성격의 지도사업비도 덧붙인다.

특히 조합장은 농산물 직거래 등 유통·가공업 무와 영농기술교육, 생활개선, 농사자금의 조달과 공급, 예금과 적금대출 등 금융업무를 총괄하며 조합직원의 인사·예산 등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도의원이나 시·군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며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와 관련,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불법·타락 행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후보들이 문제"라며 "단위조합의 모든 권한이 조합장 1인에 집중되는 현행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돈선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미련 시급하다=농협중앙회는 단위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05년 선거관리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농협 관계자는 "2005, 2006년 전남지역 100여개 단위농협이 일제히 선거에 돌입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선관위가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전국적으로 새농촌 새농협 운동이 확산되면서 과거보다 조합장 선거가 크게 정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군지역 농민은 "정치바람에 휩쓸리기 쉬운 조합장 개인의 의지에 선거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조합장 1인 독주체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사회나 대의원을 강화하거나 조합원 총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임기의 단위조합장은 30여명 안팎의 직원

/이영태기자 jilee@kwangju.co.kr

학위 브로커에 속았을 가능성 커

■신씨 왜 학위 취득 주장 굽히지 않나

귀국 즉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학력위조 파문의 장본인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신씨의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사실은 동국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예일대로부터 받은 조화 결과를 공개한 7월 11일에 객관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공식 확인됐다.

그런데도 학력위조 사실이 공개된지 2개월이 지난 17일까지도 신씨가 이런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신씨가 학위 위조 브로커에 속아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신씨는 "논문 작성을 도와준 가정교사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행방을 미국에서 찾고 있다"고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

이 '가정교사 비슷한 사람'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짜 학위를 받을 수 있다'며 신씨를 꼬드긴 학위 위조 브로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씨는 불교계와 미술계 등에서 의혹으로 떠돌던 학력위조 사건이 보도된 7월 8일 "예일대 박사를 받은 것은 맞다"며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논문과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당시 "학위만 진짜면 됐지 실사 표절을 했다더라도 무슨 상관이나. 표절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예일대와 나 사이에서 일단 해결할 문제지 기자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지 않나. 내가 교수로 임용된 것은 현장 전문가이기 때문이지 내 논문이 좋거나 내가 뛰어난 학자라서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곡미술관 주변에서는 "신씨가 인턴들에게 표절 대상 논문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표절본의 오·탈자 대조작업을 시켰다"는 얘기도 돌았으나 인턴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만일 '학위 위조 브로커'가 개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신씨 역시 속아서 진짜로 예일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착각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연합뉴스

정윤재 前비서관 범죄 혐의 포착한 듯

검찰, 피내사자 신분 소환키로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을 18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해 수사가 급박전 되고 있다. 부산지검은 정 전 비서관을 18일 오전 10시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의 자격으로 소환키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피내사자 자격으로 불

러 조사키로 한 것은 그의 범죄 혐의를 일정 부분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보완수사 착수 당시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누구든지 수사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정 전 비서관의 소환은 단순한 고소인 자격은 아니다"라고 밝혀 그동안 정 전 비서관과 김씨 간에 제기된 유착 의혹에 대한 단서를 상당 부분 포착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소환되면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밝혀내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p>한양대학교</p> <p>1588-7557</p> <p>1588-7557</p> <p>1588-7557</p>	<p>한양대학교</p> <p>1588-7557</p> <p>1588-7557</p> <p>1588-7557</p>	<p>한양대학교</p> <p>1588-7557</p> <p>1588-7557</p> <p>1588-7557</p>	<p>한양대학교</p> <p>1588-7557</p> <p>1588-7557</p> <p>1588-7557</p>
--	--	--	--